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세미나

2023. 3. 29(수) 오후 2시

CTS컨벤션홀

주최



후원

CTS 기독교TV



CTS다음세대운동본부

##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출대본) 소개

출대본은 저출산에 기인하는 인구절벽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치기 위하여 2022년 8월 24일에 종교계, 학계, 교육계, 재계, 시민단체 등 각계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하였습니다.

- 총재: 이 철, 이순창, 권순웅, 김태영, 장종현, 오정현
- 본부장: 감경철
- 운영위원장: 변창배
- 기획위원장: 장헌일



##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출대본) 경과

- 1)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 NGO 발족 (2006.1.20)
  - 아이사랑 걷기 대회, 아이사랑 사진 콘테스트 등 진행
- 2) CTS영유아문화원 운영 (2006)
  - 제휴어린이집 37여개, 헌판식 14군데 진행
- 3) 출산장려국민운동본부 출범 (2010.6.15)
- 4) 다음세대지원센터 - 대안학교 설립 지원 및 교육컨설팅 (2020.2.17)
  - 2020년 2개 학교 설립 / 2021년 4개 학교 설립 / 2022년 4개 학교 설립
  - 2023년 2개 개교 예정
- 5)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 및 심포지엄 개최 (2021.7.14)
- 6) 교회의 돌봄사역에 관한 조사 (2021.11.7)
- 7) 2022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프로젝트 심포지엄 개최 (2022.1.20)
- 8) 출산에 관한 종교별 인식조사 (2022.1.28)
- 9)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출범식 (2022.8.24)
- 10)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회포럼 \*이채익 의원실 (2022.11.15)
  - < 저출생시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아동돌봄정책 입법의 필요성 >
- 11)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지역본부 출범식
  - 광주본부 2022.11.22 | 경남본부 2022.11.30 | 전북본부 2022.12.02
  - 부산본부 2022.12.04 | 포항본부 2022.12.11

# 프로그램



- 인사말씀**      **감경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본부장 / CTS기독교TV 회장
- 격려사**        **김태영**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총재 / 백양로교회 담임목사
- 축사(영상)**   **이철, 이순창, 권순웅**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총재
- 세미나**        사회 :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 발제 1.

### 발표 저출생 정책의 대 전환

**최진호** 교수(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Profile    전)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대학원장  
 전) 한국인구학회 회장, 한국지역학회 회장  
 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브라운대학 사회학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발제 2.

### 발표 영유아 돌봄을 통한 지역소멸 극복

**안광현** 교수(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 교수)

Profile    지속가능연구원장  
 지방자치아카데미원장  
 전) (사)공공자치학회 회장  
 전) 대통령직속 TFT 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  
 전) 서울시 공익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장  
 전) (사)한국다문화협회 부회장을 역임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MATS  
 숭실대학교 행정학 박사

## 질의응답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CTS기독교TV 회장 감경철 장로입니다.

지난 여름 CTS기독교TV를 중심으로 많은 이들의 뜻이 모여 출범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2023년 봄날을 맞아 첫번째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발제자로 참여해주신 최진호 교수님, 안광현 교수님을 비롯하여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여의 시간동안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는 지역본부 출범을 통하여 그 저변을 확대해가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정책을 제안하고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펼침으로써 우리의 목소리를 국가와 사회에 반영할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는 쉼 없는 활동을 통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수차례의 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운동본부가 고안한 저출생 대책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는데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전반기에만 총 네 차례의 정책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으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보고 적잖은 심려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같은 수치만 보고 일희일비할 때가 아닐 것입니다.

더욱 세심한 연구로 저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극복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정책화하고 저출생 극복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돌봄입니다.

다음세대 영유아 돌봄의 문제를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돌봄 문제의 해소는 정교한 돌봄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길이 열릴 수 있는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그 길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봄, 저출생대책운동본부의 첫번째 정책세미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경철 본부장  
CTS기독교TV 회장

## 격려사

안녕하십니까.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를 총재의 한 사람으로 섬기고 있는 김태영 목사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잠들었던 것들이 기지채를 켜는 봄을 맞이하여,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발제를 맡아 주신 아주대학교 최진호 명예교수님, 유원대학교 안광현 교수님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진호 교수님께서 ‘저출생 정책의 대전환’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지금까지의 저출생 정책을 점검하고 방향의 전환을 통해 실제로 저출생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안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두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안광현 교수님께서 ‘영유아 돌봄을 통한 지역소멸 극복’이라는 의제로 점차 우리 사회에 드러나기 시작한 지역소멸의 위기상황을 짚음과 동시에 영유아 돌봄이 그 해결책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생의 위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실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온 사회가 큰 위기를 맞아 스스로를 뒤돌아보게 된 현 상황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환경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오늘날의 저출생 문제는 오히려 죽어가던 다음세대를 새롭게 살리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분들이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을 비롯하여 앞으로 진행해 나갈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정책세미나를 향한 지지와 성원 역시 저출생의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데 사용될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첫번째 정책세미나가 소생하는 봄날의 풍경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보다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의 발제자 분들께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영 총재  
(한교총 전 대표)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 주제발표 ]

# 저출생대책운동본부의 저출생 대책 활동을 위한 정책 세미나

사회 장헌일 원장 (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

[ 발표 1 ]

## 저출생 정책의 대전환

최진호 박사 (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 발표 2 ]

## 영유아 돌봄을 통한 지역소멸 극복

안광현 박사 ( 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 교수 )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발제1

# 저출생 정책의 대 전환



**최진호** 교수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전)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대학원장
- 전) 한국인구학회장, 한국지역학회장
- 전)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 미국 브라운대학 사회학 박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저출생 정책의 대 전환

2023. 3. 29.

최진호(아주대 명예교수)



저출생 정책의 대 전환



# 0.78



# 1. 저출산, 고령화 심화

## 1) 저출산

- 한국은 현재 전 세계 220여개 국가중 가장 낮은 출산력 기록 중.
-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생아수는 24만 9천 명으로 역대 최저.
-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0까지 감소 후 점진적으로 증가, 2050년 최대 1.21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

3



- 출생아 수는 2023년 23만 3천명으로 최저를 기록 후, 2034년 32만 6천명을 정점으로 감소, 2055년부터는 10만명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4

저출생 정책의 대 전환



## 2) 고령화

-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중.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에 815만명이었으나 2024년에 1,001만명이 되고, 2050년에 1,900만명까지 증가 후 감소.
- 고령화율은 2020년 15.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2025년에 20.6%, 2030년 25.5%, 2050년 40.1%, 2070에는 46.4%에 이를 전망.

저출생 정책의 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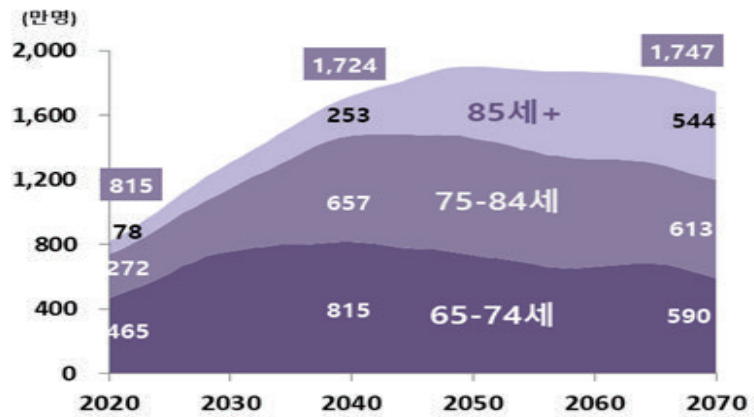
## 고령화의 속도

	도달 년도			증가 소요 년수	
	7%	14%	20%	7%→14%	14%→20%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스웨덴	1887	1972	2014	85	42
미국	1942	2015	2036	73	21
이태리	1927	1988	2006	61	18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일본	1970	1994	2006	24	12
<b>한국</b>	<b>2000</b>	<b>2017</b>	<b>2025</b>	<b>17</b>	<b>8</b>

## 저출생 정책의 대 전환



## 고령인구 연령구조, 2020~2070년 (중위)



7

## 저출생 정책의 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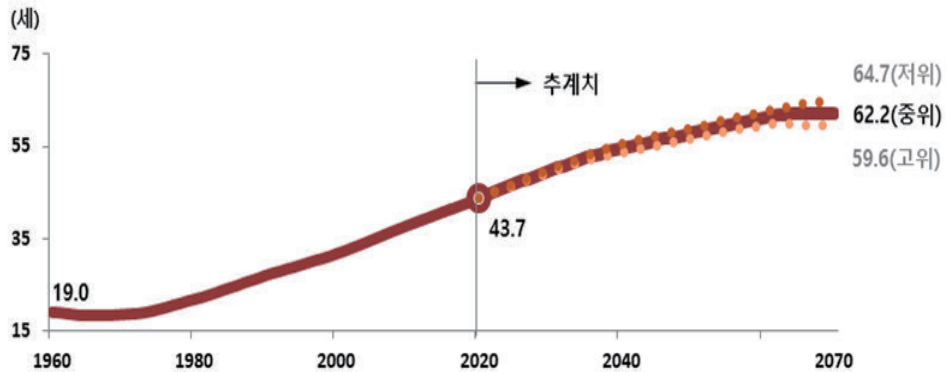
- 중위연령은 2020년 43.7세 였으나 계속 높아져 2030년 49.8세, 2050년 57.9세, 2070년 62.2로 예측.

8

## 저출생 정책의 대 전환



## 중위연령, 1960~2070년



9

## 저출생 정책의 대 전환



## 3) 인구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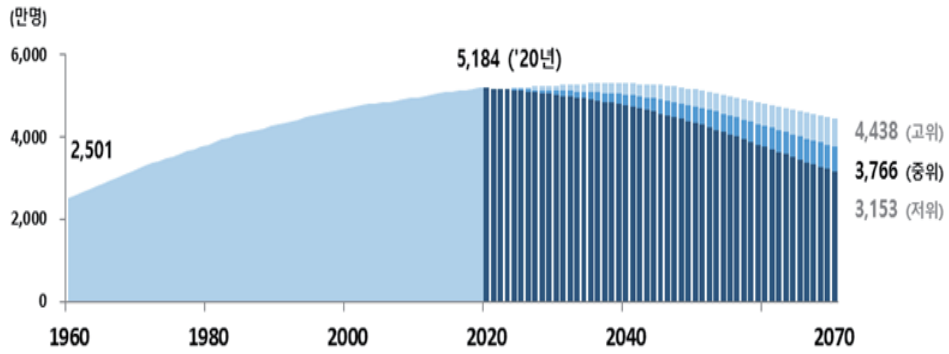
- 초 저출산, 빠른 고령화로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2070년 3,766만 (1979년 수준) 으로 축소
- 생산연령인구(15-64세)도 2018년 3,765만으로 정점, 2070년 1,737만 (2020년의 46.5%) 으로 급감

10

저출생 정책의 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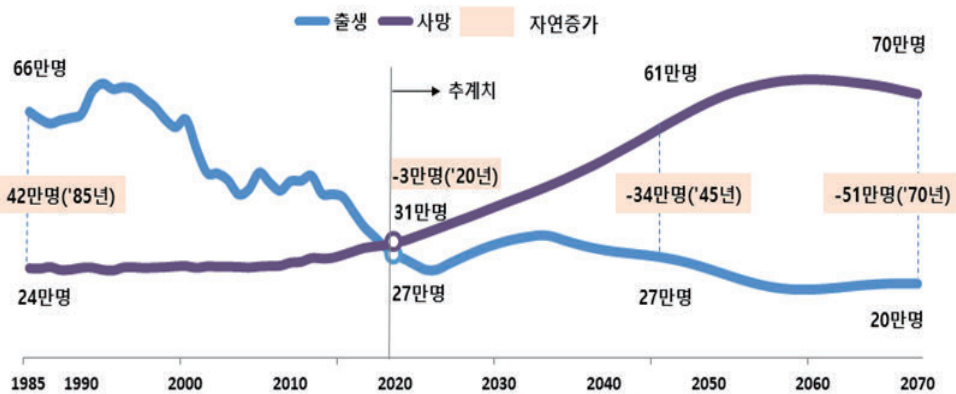
총인구, 1960~2070년



저출생 정책의 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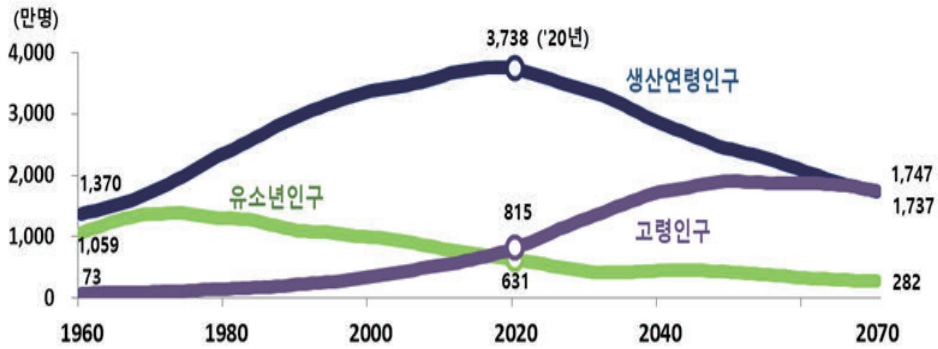
출생·사망·자연증가, 1985~2070년(중위)



저출생 정책의 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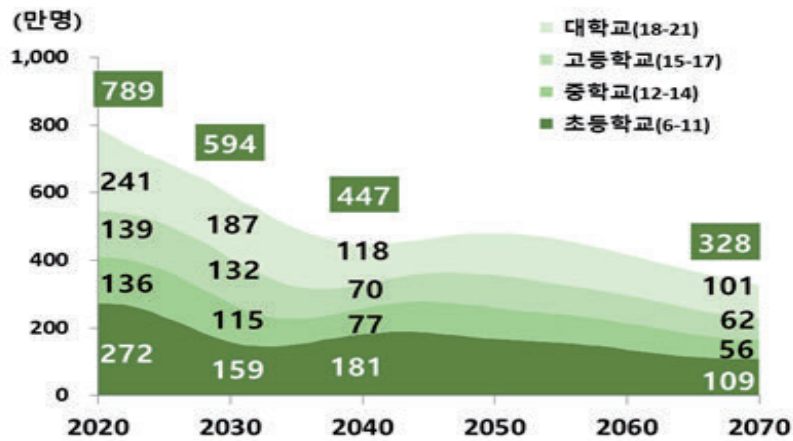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1960~2070년(중위)



저출생 정책의 대 전환



학령인구 연령구조, 2020~2070년(중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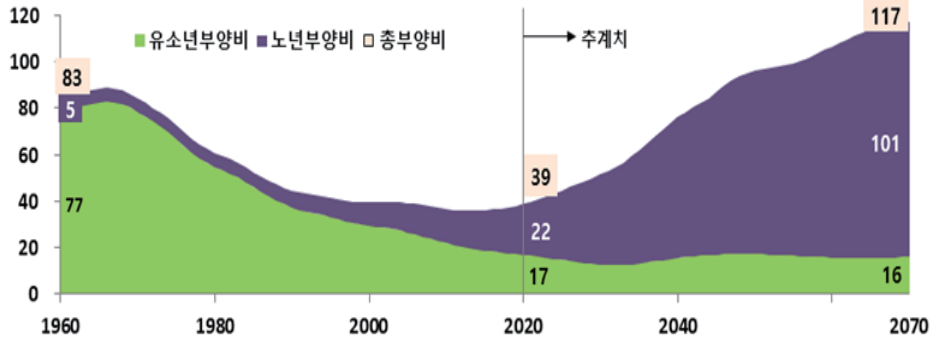


저출생 정책의 대 전환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및 노년부양비, 1960~2070년(중위)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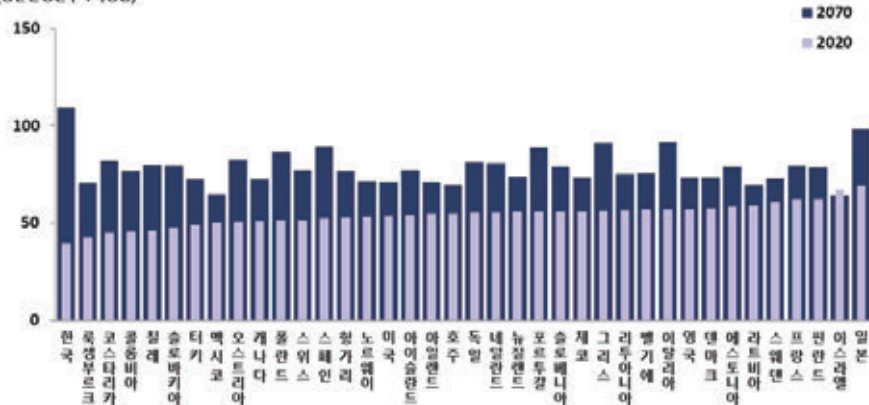


저출생 정책의 대 전환



OECD 국가별 총부양비 비교, 2020~2070년(중위)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자료: UN(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2. 정부의 정책 개입

-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제 1차 (2006-2010년), 제2차 (2011-2015년), 제 3차 (2016-2020년) 를 거쳐 현재 제4차 (2021-2025년) 계획을 집행 중.
- 저출산 분야 추진 과제는 1차 96개, 2차 95개, 3차 47개, 4차 44개 과제.



- 그 동안 저출산 부문에 투입된 예산은 1차 80조, 2차 61조, 3차 108조원으로 총 249조원이 투입.
- 현재 진행중인 4차 기간 중에는 저출산 부문에 2025년까지 196조원이 투입될 예정.



### 3. 정책 실패의 원인

#### 1) 정책 내용

-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효율적 정책수단의 선택에 실패.
- 예컨대 저출산 극복에 가장 긴급하고 기본이 되는 돌봄체계 구축 미흡.
- 돌봄 인프라 vs 현금 지원
- 저출생과 관련된 다양한 시책의 백화점식 나열로 정책의 초점 흐려짐.

19



- 제 4차 기본계획에서는 계획의 목표를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로 설정,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 적극적인 저출생 극복의지 후퇴
- 인구정책 vs 복지정책

20



## 2) 정책 평가 기능 부재

- 5년 계획기간 동안의 정책 효과를 측정, 미비점을 발견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 부족.
- 주요 정책 수단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 성과지표 개발 미흡.



## 3) 정책 추진 체계 미비와 의지 부족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의 관심부족으로 실제 회의 주재 회수 극소수.
- 위원의 임기도 2년으로 제한, 정책의 연속성 확보 제한.
-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관련 시책의 조정, 통제 미흡



## 4. 저출산 정책 재 구조화

### 1) 강력한 저출생 극복 의지 표명

- 인구문제해결을 정부의 최 우선 정책목표로 설정.
- 저출생 극복 vs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간 균형 유지.
- 출산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 미치는 시책에 집중, 정책의 효율성 제고
- 1) 돌봄 2) 일-가정 균형 3) 양성 평등 4) 출산 친화 사회적 환경조성

23



- 이중에서도 특히 돌봄은 단기 과제로 1-2년 안에 관련 인프라 완전 구축.
- 이외에도 출생률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신혼 부부 주택 공급,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중기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
- 장기적으로는 교육 개혁, 노동개혁 등도 필요.

24



## 2) 정책 평가 기능 강화

- 주기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측정, 평가하기 위한 정량 지표 개발 및 측정
- 돌봄 : 전체적인 돌봄 인프라 만족도 (어린이 집, 유치원, 초등 저학년 등)
- 일 - 가정 균형 : 근로 시간, 유연 근무 가능 및 만족도



- 양성 평등 : 가정에서의 육아 분담, 남성 육아 휴직 비율
- 출산 친화 사회적 환경 : 사회보험 가입율, 육아 휴직에 대한 직장내 태도, 여성 경력 단절 등



### 3) 인구 전담 연구기관 신설

- 저출산, 지방소멸 등 당면 인구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 평가할 전담 연구원 신설.
- 현재는 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KDI 등 여러 국책연구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연구.
- 동시에 정부 내에도 정책평가 전담부서 설치.



### 4) 정책 통합 및 조정기능 강화

- 현재 위원회로 되어 있는 컨트롤 타워를 정부 부처로 이관, 지속적인 정책 조정과 통합 기능 확보.



## 5) 인구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인식 강화

- 사회 각계 리더들에게 인구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 홍보.
- 사회 전체가 출산 친화 환경으로 변화되도록 유도.



# 감사합니다.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발제2

# 영유아 돌봄을 통한 지역소멸 극복



**안광현** 교수  
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 교수

- 지속가능연구원장
- 지방자치아카데미원장
- 전) (사)공공자치학회 회장
- 전) 대통령직속 TFT 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
- 전) 서울시 공익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장
- 전) (사)한국다문화협회 부회장을 역임
-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MATS
- 송실대학교 행정학 박사

## 영유아 돌봄을 통한 지역소멸 극복

(저출생대책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세미나 2023. 3. 29)

안광현 교수(유원대학교)

### 1. 시작하는 말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년 뒤에는 0.61명까지 떨어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소멸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202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4.4%(1만1500명) 감소했다. 또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수)은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0.7명대로 내려앉았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1.0명대가 깨진 후 5년 연속 계속 추락하고 있다. 2020년에 출생 27만6천명 대비 사망 30만8천명으로 처음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었다.

작년 한국은 12만3800명이 자연 감소(사망자 수-출생아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급감한 데다,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작년 한해 사망자는 37만2800명으로 전년(31만7680명)대비 5만5000명 이상 증가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3년부터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긴 했으나 증가폭이 1만명 안팎이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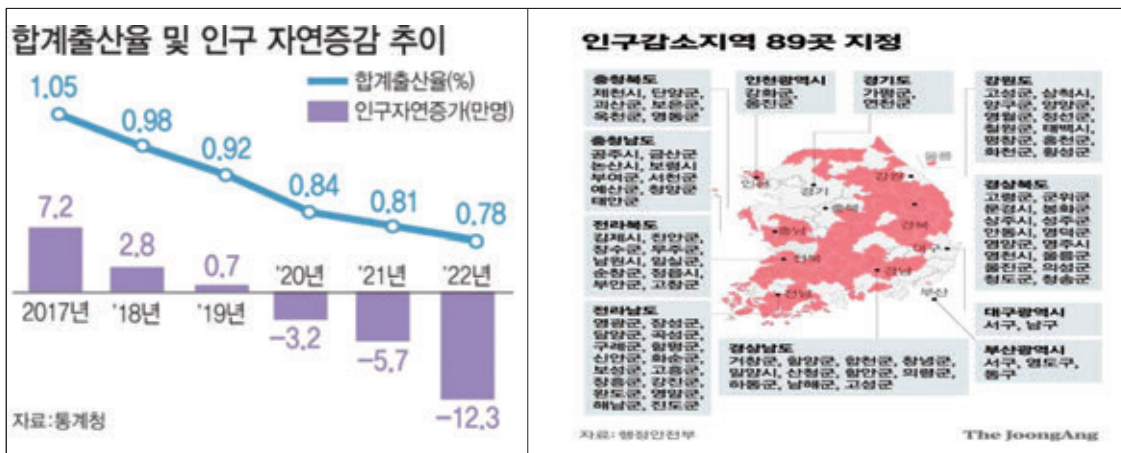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4년 1.74명으로 2명대가 무너진 이후 2017년(1.05명)까지 1명대를 유지했지만 2018년 0.98명으로 하락했고 지난해는 0.78명으로 빠르게 줄고 있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지난 2006년 2조 원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2022년엔 약 59조 원에 달했다. 17년 간 총 300조 원이 넘는 액수이지만 정책은 실패했다. 출산율이 1.3명 미만일 때 초저출생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1년도에 이미 진입, 급격한 변화 추이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는 교육, 국방, 경제, 의료, 유통, 주택 등을 비롯해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미친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너무 빠른 인구 구성의 변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다.

이 같이 한국 전체가 심화되는 저출생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역 젊은 층의 수도권으로 이주가 가속화하면서 지역소멸은 더 빨라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질적 격차 심화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고임금 양질의

일자리·첨단산업 등이 편중된 수도권으로의 집중 심화 속에 중소도시(3만 이상~50만 미만)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1999년 54.1%:45.9%에서 점점 좁혀져 2019년 50%로 동률을 이뤘고, 2021년 기준 49.6%:50.4%로 수도권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 한국의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이 같은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가운데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에게 지방소멸은 어떤 의미일까? 실제로 그들에게 가장 큰 과제는 “늙고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있는가,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이다.

지역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져오는 문제의 핵심은 “돌봄의 소멸”이다. 자동화시대, 메타버스와 AI시대이지만 돌봄은 사람이 가까이에서 직접 감당하는 일이다. 사람이 사라지면 돌봄도 사라진다. 돌봄이 사라지면 삶도 사라진다. 인구 감소가 가져오는 가장 큰 공포는 지역 자체의 소멸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돌봄의 소멸이다.



저출생은 지역인구 하락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지방대학 소멸위기는 곧 지역소멸의 위기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젊은 층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은 공동현상이 심각하다. 문을 닫는 대학들의 기준이 다른 무엇이 아닌 남쪽 벚꽃이 피는 순서라는 점이 문제다. 비수도권인 소규모 도시의 대학들이 남쪽에 몰려 있어 벚꽃 피는 순서라는 말이다. 지방대학이 어려운 이유의 핵심 키워드는 '생산'과 '분배'이다. '생산'의 문제는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이고 '분배'의 문제는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의 문제인데, 바로 이 '생산'과 '분배' 둘 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이다.

이제는 청년세대에 결혼과 출산은 사회적 관례가 아닌 선택의 문제가 되었고, 이삼십대 N포세대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10여 년 전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이르는 말로 3포 세대라는 말이 등장하였는데, 여기에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더해 5포 세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7포 세대에서 더 나아가 포기해야 할 숫자가 가늠이 안 되는 N포 세대까지 등장하였다.

청년들이 포기한 것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생이며, 출산율의 급감은 결국 인구소멸국가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된다. 단순한 출산장려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저출생 문제이다. 출산은 꿈꾸는 것조차 사치라고 말하는 청년들에게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부동산값 상승으로 젊은 부부가 아이를 키울만한 집을 구하는 게 엄두가 나지 않는 세상이다. 일타강사 수업을 듣는 게 당연시되는 등 고착화된 사교육 세상은 더욱 출산의지를 떨어뜨린다. 육아휴직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이는 직업 안정성이 보장된 정규직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주로 누릴 수 있다. 사회는 더욱 더 맞벌이를 강요하는 데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출산장려정책으로 많은 지원이 시행되고 있지만 출산 후 육아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보육과 교육, 주거와 정주여건 등 수많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 2. 저출생의 원인과 정부의 대응

### 1) 저출생의 원인

국가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 왔는데, 오히려 출산율은 왜 낮아지기만 할까? ‘왜 지금의 세대는 출산과 육아를 기피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세대를 이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우리 청년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정부에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했는데 오히려 출생률은 더 낮아지는 것은 한마디로 정부정책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비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되지 못하고, 안정적 육아를 위한 제도나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정책이었다. 즉, 수요자 측면이 아닌 공급자 측면에서의 정책이었기에 실패했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지난 2006년 2조 원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2022년엔 약 59조 원에 달했다. 17년 간 총 300조 원이 훨씬 넘는 액수이지만 정책은 실패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매우 고달프다. N포 세대라고 할 만큼 힘든 상황이기에 출산

을 기피하고,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 직업, 주택, 여성 경력단절, 노동시장의 격차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이다.

첫째,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출생률이 낮다. 2020년 기준으로 30대 미혼율이 얼마나 될까? 30대 남성의 미혼율은 50%를 돌파했다. 30대 전체 남녀 미혼인구는 42.5%이다. 2000년 대 이후 미혼인구는 급격하게 상승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청년들은 전쟁보다 더한 경쟁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동년배뿐만 아니라 윗세대와도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다가 “내가 사는 게 중요한가? 후손을 낳는 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한다. 생각해보니 “나도 못살겠는데 무슨 애를 낳아, 나부터 살아야지” 라는 입장이 된다.

셋째, 돌봄과 양육문제이다. 이전의 대가족제에서는 돌봄과 양육은 할머니 할아버지 등 여러 가족들이 분담하였는데, 핵가족화 된 사회에서는 불가능해졌다. 오로지 부모의 몫이 되었다. 시간도 부족하고, 양육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렵다.

넷째, 경제적 문제이다. 안정된 일자리는 손꼽을 정도로 적고, 도시의 집값은 수십 년을 벌어도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 사교육은 힘들고, 심리적 불안감은 높아졌다. 아르바이트 구직자 7명 중 1명이 생계형 30대이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 중 30대가 30%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 한 명의 평균 연소득은 2,162만 원에 취업자 비율은 약 67%이며, 또한 절반 이상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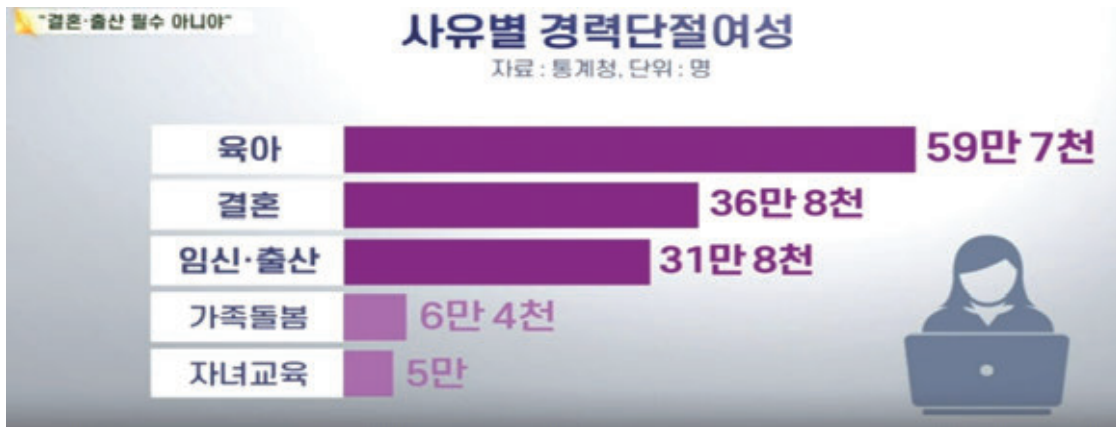
다섯째, 가치관의 변화이다. 비혼은 전 세계적인 가치관 변화의 추세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자식이 곧 노후를 대비하는 시대였고, 그러한 산업구조였다. 하지만, 이제는 굳이 함께 살지 않아도 1인가구로서 생활할 수 있고, 자신의 가치관을 이루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만 20~34세 미혼자 중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는데 동의한 여성은 4%, 남성은 약 13%로 큰 차이를 보였다.<sup>1)</sup> 또한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여성은 약 53.2%로 남성 25.8%의 2배 이상에 달했다.<sup>2)</sup>

여섯째,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성차별적 구조도 문제이다. 출산을 하면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출산이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아직까지는 결혼과 출산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부담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5년 전 정부는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성차별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독박 육아와 경력단절, 성별 임금격차 등 성차별은 여전하다. 지난해 경력단절 여성은 15~54세 기혼 여성(810만 3천명) 중 약 17%인 139만 여명이며, 대부분 육아와 결혼, 임신이

1) 연합뉴스 2023. 3. 18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2) 대상: 만 20세 이상 34세 이하의 전국 미혼 성인 남녀 281명, 자료: 사회복지연구

이유이다.



서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조건이라는 필요조건과 성평등 돌봄이라는 충분조건이 만나 비교적 빠르게 저출생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다.

## 2) 저출생의 정부의 대응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7년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쓰인 예산은 300조 원이 넘는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지난 2006년 2조 원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2022년엔 약 59조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저출생 예산'에는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이 무더기로 포함돼 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예산도 포함돼 있는데, 이를테면 청년 인구 급감에 따라 병력 구조를 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하는 사업도 저출생 대책 예산의 범주에 있다. 정작 저출생 정책의 핵심인 가족 복지나 보육 예산 규모는 선진국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저출생 대책 예산에 수백 조 원을 쏟아 부었는데 출산율은 왜 오히려 떨어질까? 지난해 저출생 대응 사업 중에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확대, 해양수산 분야 창업지원 등 저출생과는 거리가 있는 사업들이 포진해 있다. 이전에도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이 포함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큰 변화는 없다.



고용, 주거 등 간접적으로나마 저출생과 관련이 있는 대책도 각 부처들의 기존 복지 정책을 짜깁기한 수준이다. 이는 시대 변화에 맞는 정확한 욕구 대응 분석을 못하다 보니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 배분이 잘 안 되고, 기존의 익숙한 정책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이다. 보육 등 직접적인 저출생 지원책인 '가족 분야' 예산은 한 해 사이 1조 원 가량 늘어난 19조 원에 불과하다. GDP 대비 '가족 분야' 예산은 선진국의 30~40%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다.

중구난방인 예산을 정비하고, 직접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문제는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생 문제를 총괄하는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예산권과 정책결정권이 없어 정책을 독자적으로 기획할 수 없다. 강제성이 없다보니 각 부처들도 인구 정책을 고심하거나 예산을 배정하는 데 소극적이다. 이에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에 컨트롤타워로서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담 부처를 만들어 인구 특임장관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있다. 결국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힘 있는 조직이 정책을 끌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생 흐름이 멈추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인구감소와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젊은 이민자가 대폭 늘어나지 않으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다. 사회적으로 저출생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다. 노령 인구를 부양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사회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소비와 생산이 위축되면 국가 경제 전체가 위축된다. 저출생 흐름을 막지 못하면 나라가 쇠망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이다.

### 3. 지역소멸 현황



## 1) 지역 인구 감소

저출생에 아기 울음소리는 줄었지만 고령화로 사망자는 늘면서 지난해 한국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의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 인구절벽은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혹독하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난 15년간 2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도 저출생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막연한 예산확대보다는, 사회적 돌봄채널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파른 인구감소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모두 인구가 줄어들긴 했으나, 지방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인구 감소폭이 수도권보다 훨씬 가팔랐다.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인구가 감소했는데, 그중에서도 경북(1만6500명), 부산(1만3600명), 경남(1만3400명), 전남(1만3000명)이 순으로 크게 줄었다.<sup>3)</sup>

인구수에 비례한 자연증가율(인구 1000명당 자연증감)로 따져보면 자연감소율이 높은 상위 10개 시도가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전남(-7.1명), 경북(-6.3명), 전북(-6.1명), 강원(-5.1명), 충남(-4.5명) 순이었다. 반면 수도권인 인천, 서울은 1.0명대의 자연감소율을 보였고, 경기도는 -0.3명으로 세종을 제외하고 자연감소율이 가장 낮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인구문제에서 균형발전도 중요한 문제”라며 “최근 전주에서 진행했던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 지방이 발전하면 좀 더 많은 인력이 남고 인구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천명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걸 고려하면 사실상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약 300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효과를 체감하기 모호한 저출생 대책보다는 돌봄 확대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다가 올라간 유럽국가들을 보면 사회적 돌봄 시설의 확대와 아빠의 돌봄 채널 확대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며 “한국도 영아에 비해 아직도 미비한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 확대 및 아빠의 육아 장려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저출생 현상으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4년 뒤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세종·구미·양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3) 자료: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대부분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미래연구원이 작성한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소멸위기에 해당하는 지역(시·군·구)은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으로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47년 인구 소멸위험이 낮거나 보통·주의 단계인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소멸위험 진입단계 지역은 서울과 인천 일부와 수원·용인·김포·하남·화성·고양 등 수도권 지역과 아산·천안·진천·청주·세종·유성 등 충청 지역 일부, 구미·전주·경산·제주·김해·양산 등 극소 지역에 그쳤다. 이 외에 지역은 모두 소멸위험 고위험단계에 속했다. 서울·수도권 일부, 지방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한 한국의 대부분 지역이 인구가 소멸될 위험이 아주 높다는 의미다. 그나마 이 시군구별 장래 소멸 위험지역 분석은 합계출산율 0.98명이 지속될 경우를 가정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소멸위험지수를 적용해 구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지역소멸은 더 가속화되고 확대될 수 있다.

2020년 기준 전체 시군구의 66%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었고 인구 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60여곳(26%)에 달한다. 또 2021년 기준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 2) 지방대학소멸과 지역소멸

2023년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대학마다 비상이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분명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대학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수험생 숫자가 매년 줄고 있고 한 해 출생인구가 급감하니 지방대학 소멸은 뻔하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젊은 층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은 공동현상이 심각하다. 수도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지방 사람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갈 필요성을 못 느끼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방대학 소멸은 곧 지역소멸을 재촉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국 대학 평균 신입생 충원율은 계속 낮아졌지만, 오히려 서울지역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은 상승하는 모순점이다. 2012년 전국 대학 평균 신입생 충원율은 92.1%이었지만 2022년에는 87.6%로 낮아졌다. 반면에 2012년 서울지역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은 8만4,578명에서 2022년 8만7,072명으로 2,494명이나 증대된 것이다.

역대 정부가 구조조정 정책 추진 결과 2003년 대비 2021년 입학정원은 총 18만



명 감소(27.7%)했다. 수도권 대학은 3만5천 명(15.9%) 감소에 그쳤지만, 지방대학은 14만6천 명(33.6%)이나 감소했다. 그런데도 전체 대학 입학정원에서 수도권 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3.7%에서 2021년 39.2%로 5.5%p 상승했다.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수도권 중심이 한층 심화된 것이다.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의 원인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취업에서의 어려움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모여 살고 있으며, 100대 기업의 91%가 밀집해 있다. 이처럼, 모든 인프라와 일자리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누가 자발적으로 지방대에 가겠는가?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자율과 경쟁’ 논리에만 의존, 수도권 대학보다 경쟁력이 낮은 지방대학에 대한 책임의무를 홀대한 것도 문제이다. 재정지원도 ‘선택과 집중’의 경쟁방식을 도입해 지방대학에 불리했다. 경쟁이 심화하면서 교육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학생 충원 또는 취업 등이 비교적 쉬운 지리적 환경에 놓인 대학이 재정지원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지방대학은 ‘경제와 문화, 복지 등’ 지역 생활터전의 구심점이다.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방공동화가 발생, 국가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의 공존을 넘어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전체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재원확보, 지역인재 채용 촉진 등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의 상생협력이 필요하고, 지자체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인구유입을 위한 양질의 우수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적재적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대학 위기의 본질적인 이유는 주변 지역 일자리 부족에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대학이 함께 지역을 혁신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 3) 돌봄 사각지대 발생과 지역 붕괴

어린이집이 매년 1900곳씩 사라졌다.<sup>4)</sup> 5년 사이에 영유아가 145만에서 105만으로 급감하였다. 운영비 85%인 인건비를 감당 못해 9,000여 곳이 폐원하였고, 3만여 곳이 남아있다. 아동돌봄시설의 급격한 감소는 돌봄공백지역이 발생하며, 이는 저출생 현상 극복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나아가 지역 붕괴, 혹은 지역소멸로 귀결될 수 있다. 어린이집의 폐원으로 인해 2021년 전국 3,495개 읍·면·동 가운데 어

4) 조선일보 2022-10-11.

린이 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554개로 전체의 15.9%에 달하며, 2017년 미설치 지역 466개와 비교하면 88개나 증가한 수치이다. 돌봄사각지대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며,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만238곳이던 어린이집은 2022년 8월 현재 3만1,099곳으로 4년 8개월 동안 9,139곳 줄었다. 지성애 전 한국유아교육학회장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아파트 단지에 설치한 20명 규모의 가정 어린이집이 많이 폐원하는 추세”라며 “가장 큰 이유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저출생 기조”라고 말했다. 국내 영유아(6세 미만 취학 전 아동)는 2017년 145만243명에서 지난 8월 기준 105만4,928명으로 줄었다. 5년 새 39만5,315명(27.3%) 감소한 것이다. 인천 부평구에서 33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강모(32)씨는 “주변에서 한 때 큰 유치원이었던 4층 건물에 이제는 노인요양보호센터가 자리 잡아 저출생 고령화 시대가 실감 난다”고 말했다.

시도별로 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경기도로, 5년간 1만1,825곳(2017년)에서 9,495곳(2022년 8월)으로 2,330곳(19.7%)이 사라졌다. 경기도의 영유아는 같은 기간 39만4,882명에서 31만9,088명으로 7만5,794명(19.1%)이 줄었다. 둘째로 어린이집 감소가 많은 서울은 5년간 1,477곳이 사라지고 영유아 7만1,528명이 줄었다. 김영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지역 분과장은 “수도권이 어린이집 수가 가장 많고 폐원도 가장 많다”며 “특히 경기도는 신혼부부가 주로 첫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	2	1	1	1	1	1	1	2	3	3	4
부산	7	7	6	4	7	6	4	5	5	5	6
대구	0	1	1	1	0	0	0	1	2	2	3
인천	10	9	5	5	4	6	6	8	8	9	9
광주	3	3	4	3	3	3	3	4	5	6	6
대전	1	2	3	2	2	2	1	1	1	1	1
울산	4	4	5	4	3	2	2	2	2	2	3
세종	0	1	1	0	1	0	0	1	1	1	2
경기	18	17	13	15	20	13	11	12	13	14	17
강원	25	25	26	26	25	25	25	27	29	28	30
충북	32	29	29	30	32	32	33	36	36	39	38
충남	53	37	34	34	36	37	39	39	44	51	52
전북	64	65	63	65	66	66	67	70	71	76	75
전남	79	79	77	79	79	81	83	86	92	95	96
경북	93	90	87	87	93	93	96	99	103	104	107
경남	82	82	85	88	93	91	93	96	99	104	103
제주	1	1	1	1	1	2	2	2	2	2	2

살림을 시작하는 지역이라 영유아 보육 수요도 이들의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코로나 상황도 어린이집 감소에 한몫했다.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이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한 해에만 총 3,237곳이 폐원했다. 지성애 전 회장은 “코로나 시기 정부에서 만 0~5세 아이를 둔 가정에 매월 10만~20만원씩 ‘가정 양육 수당’을 지원하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 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 3,157곳에서 2021년 5,437곳으로 2,280곳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민간 어린이집은 3,442곳, 가정 어린이집은 5,765곳 줄었다.

그나마 정부는 내년 2023년도 공공 보육 예산을 올해보다 약 120억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예산을 올해 609억300만원에서 내년 491억7,000만원으로 19.3% 삭감했다. 어린이집 설치 예산이 600억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5년 만이다. 기존 어린이집의 증·개축과 개보수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도 38억5,900만원에서 34억7,300만원으로 10%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줄어든 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일 뿐”이라며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540개소 확충할 예정으로, 올해 확충한 552개소와 비교해 거의 줄지 않았다”고 했다.

초등학생·대학생 중심 학령인구 급격한 감소로 교원·시설 등 교육인프라 과잉, 대학 미충원 및 재정악화 심화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병역자원(20세 남성)의 급격한 감소로 군 인력 충원·운영 어려움의 상시화 및 국방 공백 우려가 큰 상황이다. 만 20세 남성인구(만명): (20년)33.4 (22년)27.4 (25년)23.6 (30년)23.5 (35년)23.2 (40년)15.5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최근 지역별로 아동 인구감소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도시지역에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와 비교할 때 농어촌지역의 돌봄서비스 공급은 감소하고 있다. 접근성과 편의성 높은 돌봄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의 아동돌봄서비스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유휴공간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신규로 공급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아동돌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지역의 종교 시설을 활용하는 등 접근성이 높은 곳에 돌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지앤컴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취학 자녀가 다니고 있는 돌봄기관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집에서 가깝기 때문’이라고 응답한자는 65.6%나 된다.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 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긴 근로시간 등으로 아동 양육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남녀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 그 부담이 더 커서 양육이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무상보육, 초등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지만 돌봄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시설 돌봄의 틈새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제공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는 만족도가 높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맞벌이 가구 등은 불가피하게 민간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와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 4) 소멸위험지역

지역소멸의 경우 소멸위험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9.6%(113개, '22년)이다. 이는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인구)가 0.5미만인 지역을 나타낸다. 그래서 지방은 유희자원 증가 및 공공행정서비스에 사각지대 발생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사회적 혼잡비용 급증하는 상황이다.

국내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2년 만에 11곳 늘어 절반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근 제조업이 급격히 쇠퇴한 경남 통영시와 전북 군산시 등이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에 따르면 2022년 3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제주와 세종은 각각 1개 지역으로 계산) 중 113곳(49.6%)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조사에 따른 소멸위험지역은 2015년 80곳, 2020년 102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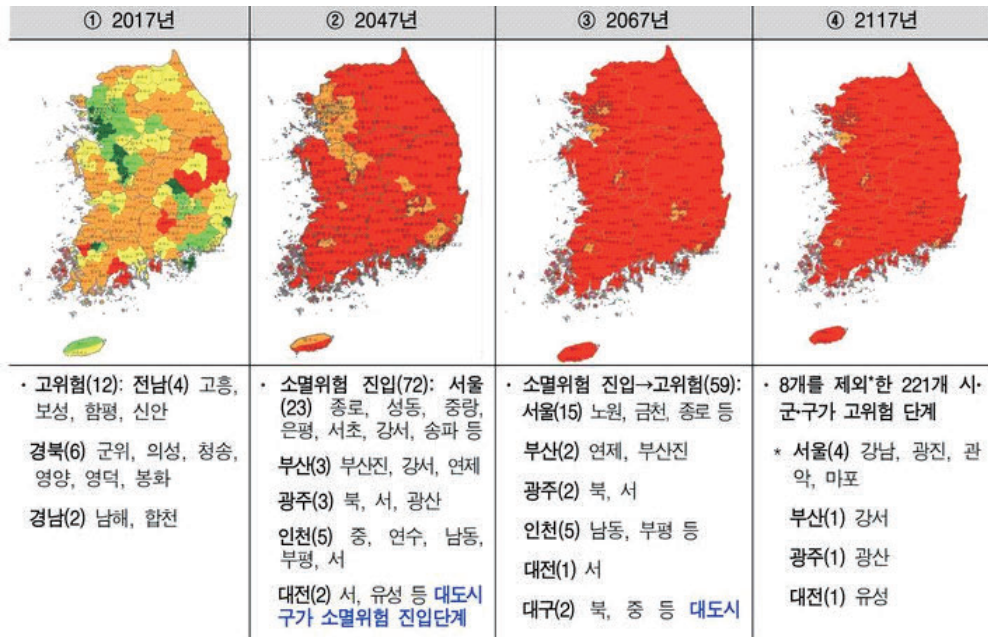
소멸위험지역은 지역 내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로 분류한다.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노인 인구가 가임여성 인구보다 2배 이상 많아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고용정보원은 최근 지방 소멸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제조업 쇠퇴'를 꼽았다. 올해 소멸위험지역으로 편입된 통영시와 군산시는 자동차와 조선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2018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상호 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영호남 전통 산업도시의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지방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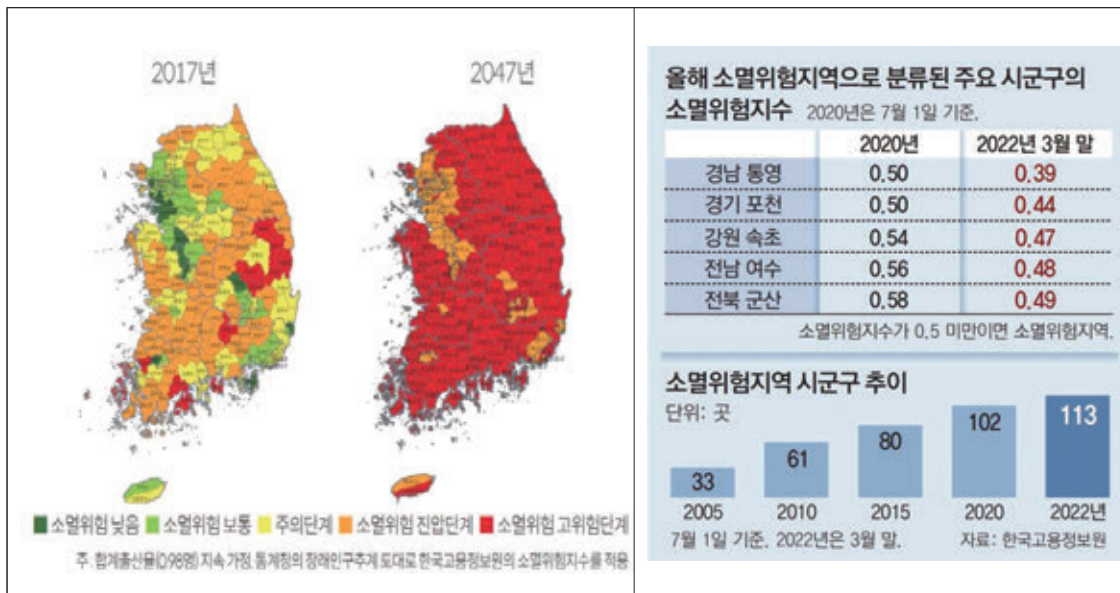
이번에 수도권인 경기 포천시, 동두천시 등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강원 속초시, 충북 충주시, 충남 당진시 서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나주시 등도 마찬가지다. 소멸위험지수가 1.5를 넘어 소멸위험이 거의 없는 '소멸저위험지역'은 올해 조사에서 처음으로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었다. 2020년엔 경기 화성시 등 5곳이 있었다.







경남 통영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주민 4,061명이 지역을 떠났다. 3월 말 기준 통영시 인구는 12만4872명. 9개월 사이 전체 인구의 약 3%가 줄어든 것이다. 이는 오랜 조선업 불황의 여파다. 인구가 크게 줄어들자 통영시는 셋째 아이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2020년 첫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인구 유출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지방 위기의 핵심 원인은 일자리 부족이다. 대표적인 지역이 통영시와 전북 군산시다. 통영시의 소멸위험지수는 2015년 0.82에서 2020년 0.50, 올 3월엔 0.39까지 낮아졌다. 같은

기간 군산시 역시 0.82→0.58→0.49로 하락했다. 지수가 하락할수록 소멸 위험이 높다는 뜻이다.

두 지역은 최근 기반 산업이 붕괴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때 1만8,000여 명의 일 자리를 책임지던 통영시의 조선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됐다. 2018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이 2020년 재가동됐지만 고용 회복은 아직 더디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017년 가동을 멈췄고, 이듬해 한국GM 군산공장마저 폐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2019년 통영과 군산의 제조업 취업자는 각각 38.3%, 26.3% 줄어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그나마 남은 일자리도 수도권 등 대도시와 비교하면 격차가 커 지방 청년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소멸위험지수 0.2 미만인 ‘소멸고위험지역’의 고용보험 가입자 평균임금은 소멸 위험이 낮은 지역의 84.3%에 불과했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인구 감소의 본질은 저출생보다는 인구 유출”이라며 “일자리와 교육, 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경기 포천시와 동두천시는 이번에 처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수도권 안에서도 더 좋은 일자리나 생활 인프라를 찾아 이주하기 때문이다. 부산도 4개 구가 소멸위험지역이다. 이상호 고용정보원 일자리 사업평가센터장은 “대도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뿐 아니라, 높은 집값 때문에 인근 신도시로 이주하는 젊은층이 늘면서 대도시의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수별 퍼지변환점수

구분	지역안전지수(E)	지방소멸지수(F)	삶의 만족도(Q)
서울특별시	0.906	0.688	0.750
부산광역시	0.813	0.406	0.188
대구광역시	0.281	0.563	0.000
인천광역시	0.531	0.813	0.500
광주광역시	0.906	0.625	0.813
대전광역시	0.000	0.750	0.438
울산광역시	0.406	0.938	0.375
세종특별자치시	0.688	1.000	1.000
경기도	1.000	0.875	0.625
강원도	0.094	0.156	0.688
충청북도	0.406	0.313	0.250
충청남도	0.094	0.250	0.125
전라북도	0.531	0.156	0.313
전라남도	0.281	0.000	0.563
경상북도	0.750	0.063	0.063
경상남도	0.625	0.406	0.875
제주특별자치도	0.188	0.500	0.938

출처: 지역안전지수와 지방소멸지수를 활용한 지역위험 유형화 및 지역행복과의 퍼지셋 결합관계 분석. 서인석 외,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8권 제3호(2021. 12): 95-122.

국내 소멸위험지역 113곳 중 소멸위험지수가 0.2~0.5 미만인 ‘소멸위험진입지역’은 68곳, 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인 ‘소멸고위험지역’은 45곳이었다. 정상지역(소멸위험지수 1.0~1.5 미만)은 2년 전 40곳에서 올해 23곳으로 줄었다. 광역시도 중에선 기존 전남과 경북에 이어 강원과 전북이 새로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국내에서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각각 0.11)이었고, 전남 고흥군과 경남 합천군, 경북 봉화군(각각 0.12)이 뒤를 이었다. 소멸 위험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화성시(1.44)였다. 대전 유성구(1.36), 세종시와 울산 북구(각각 1.32)도 소멸 위험이 낮았다.

#### 4. 저출생 정책평가와 외국사례 비교

##### 1) 정부의 저출생 정책평가

정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그 이행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이다.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중앙지원센터와 광역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 모니터링, 컨설팅 제공 등 업무지원을 강화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의 미연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자동매칭을 지원하고, 챗봇상담 등 편의기능을 도입하겠다. 또한,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아동 돌봄 플랫폼 간의 연계를 추진한다. 민간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올해부터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2024년부터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민간 제공기관을 관리하고 컨설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검토한다.

둘째,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먼저,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실기·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한다. 공공 아이돌보미의 양성교육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후 채용’ 방식으로 2024년에 개편한다. 돌봄인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등 자격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도 운영한다. 우수한 돌봄인력의 유입과 지속적 활동을 위해 적절한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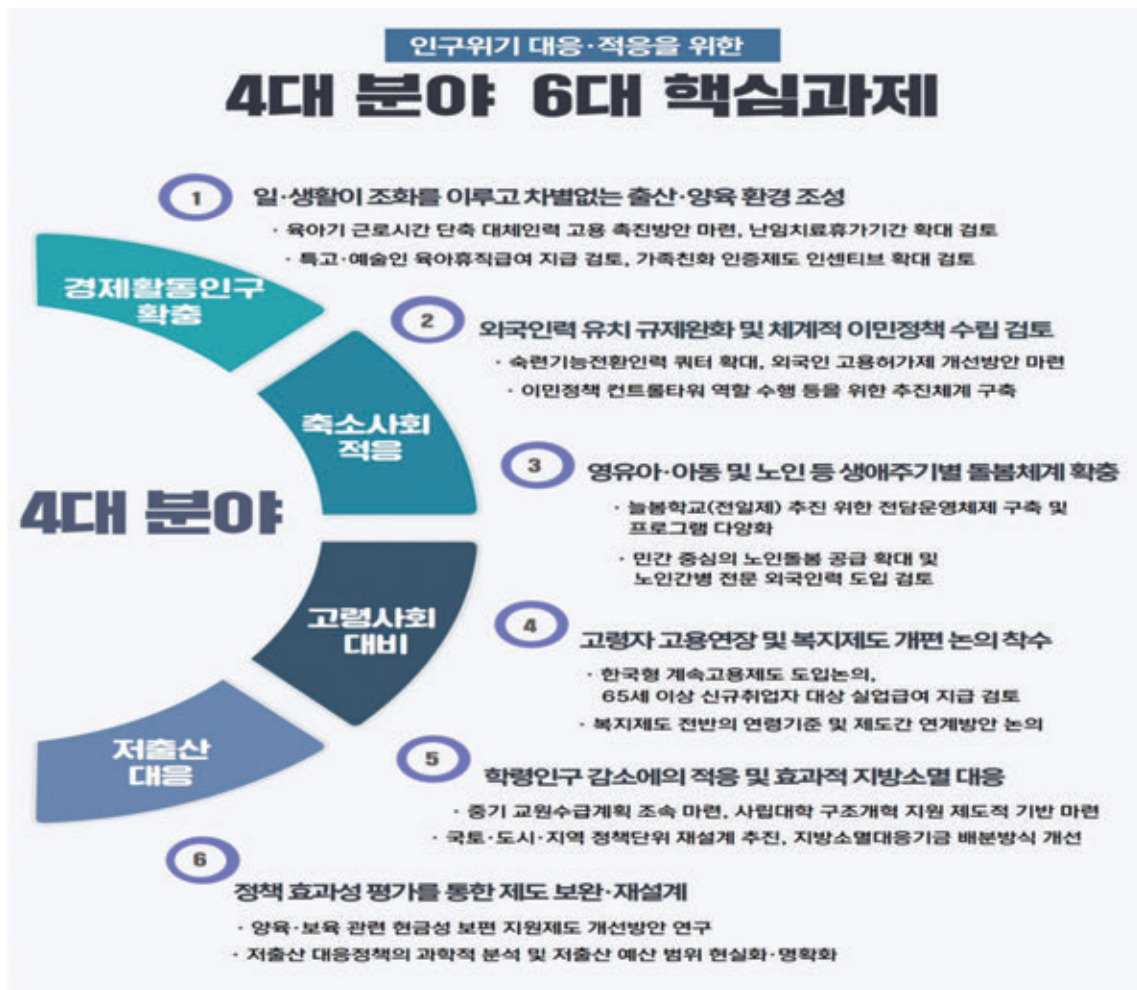


셋째,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이용요금을 합리화한다. 이용자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야근 및 출장 등으로 긴급한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등·하원 등을 위한 2시간 이내의 짧은 시간 이용이 가능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도입 추진한다. 서비스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에 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가구와 지원 시간을 확대하고 한부모, 장애부모 등 취약계층 가구와 초등학생을 둔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한다. 또한, 현재는 만 0~1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부모급여를 받더라도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향후 영아종일제 활성화를 위해 양육비용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돌봄인력을 확대하고,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민간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28일 나경원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교육, 병역,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산업구조, 복지제도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학령인구 병역자원 감소 및 지역소멸 가속화 등에 따른 축소사회 도래한다. 중기적으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성장 잠재력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노년부양비 급등에 따른 복지제도 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하기 위한 4대 분야별 대응방안을 강구 하되 특히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인구 위기 대응 종합대책으로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이다. 특히 6대 핵심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 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양육 보육 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여 그를 기반으로 과감한 제도 정비를 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이번 대책을 보완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을 정비하여 ‘23년 「저출생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발표할 계획이다.





## 2) 저출생 정부정책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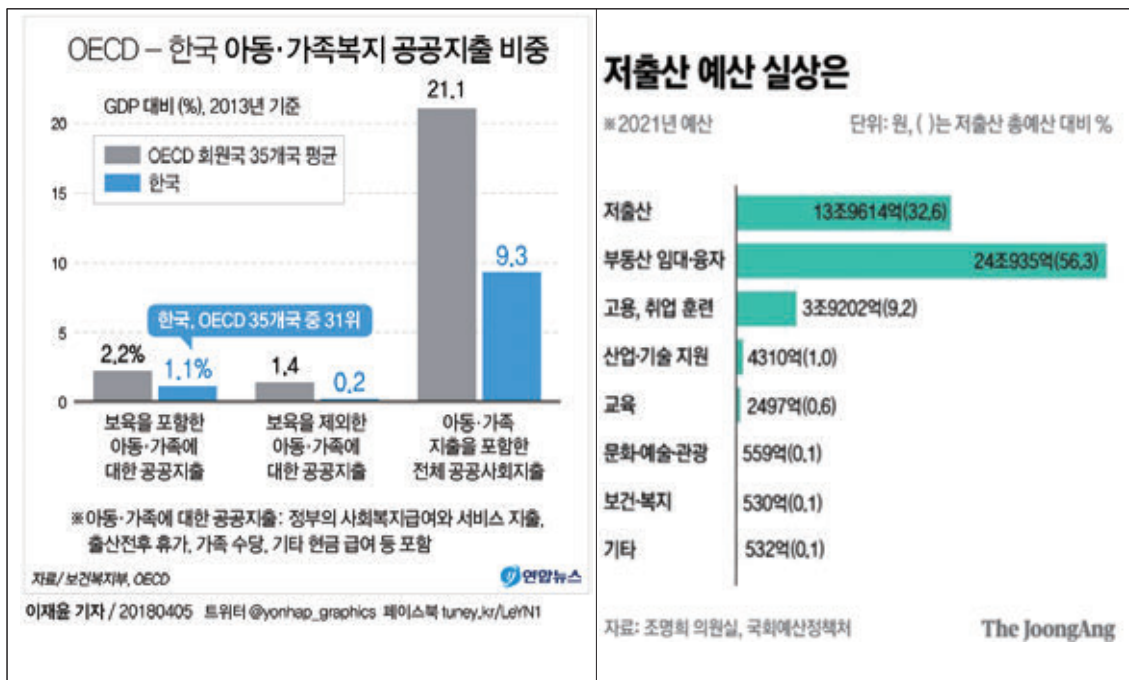
### (1) 비효율적인 예산활용

2006년 이후 3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고 활용했다. 2006년 이후 제1차~제3차 「기본계획」에 의한 저출생 대응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노령화를 막지 못했다는 현실은 202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4차 「저출생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저출생 대응의 측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표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과소한 가족지원이다. 2007~2017년간 한국의 GDP 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은 OECD 주요국 중 최저였다. 이는 가장 합리적인 청년들이 가장 큰 경제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제1차~3차 「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생 대응이 주요국 중 가장 내실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지난 15년간의 저출생 대응 정책의 확대와 예산의 증가가 체감 가능한 가족지원 확대와는 괴리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저출생 국가에서 다산국가로 변화한 프랑스를 살펴보면 가족지원에 대해 지출하는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6%로서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가장 높으며 우리의(1.3%) 3배에 달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의 기본정책은 가족지원 확대나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2021년 저출생 대응 예산 규모는 48.3조 원으로 급증했지만 가족지원 예산은 18.3조 원에 머물렀고, 3차에서 4차에 이르는 「기본계획」들이 적시해 왔던 사회경제적 요인인 고용 격차, 주택가격 급등, 교육 경쟁 등과 관련된 세부 과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 (2) 저출생의 근본적 원인이 된 경제적 불확실성

세계금융위기(2007~2008년)를 거치면서 나타난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추이의 새로운 분기 현상은 전통적인 고출산 국가와 저출생 국가로 양분되었던 과거의 양상이 거의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까지 국가 간 비교에서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주해 왔던 가족지원 외에 경제적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고출산 국가는 관대한 가족지원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정과 같은 삶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합계출산율이 상승에서 하강으로 전환되고 있고, 저출생 국가는 미흡한 가족지원 상태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상승에서 하강으로 전환되고 있다. 반면 과거 초저출생 국가였던 독일과 헝가리는 경제위기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경험했던 반면 가족지원을 크게 확대

함으로써 합계출산율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초저출생 장기지속 심화는 여전히 미흡한 가족지원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여타 저출생 국가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ECD 주요국과의 비교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고 지표는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최저 수준의 청년 대졸자 고용률이다. 2009~2019년간 주요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헝가리를 제외하고는 일관된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이 줄곧 가장 높았다. 반면에 청년 대졸자 고용률은 고출산 국가일수록 높고 저출생 국가일수록 낮은 경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국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았다. 즉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은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삶의 조건에 대한 성찰성을 증대시킨다. 이처럼 한국 청년들의 결혼·출산 선택이 가장 덜 관행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삶의 기본 조건인 가장 저조한 청년 대졸자 고용률은 결혼·출산 선택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주요국 중 가장 합리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한국의 청년들이 가장 큰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한다.

### (3) 사회구조적 대응 미흡과 인식 변화의 한계

출산양육 관련 부담 완화 등 현상적 대응을 우선함으로써 고용, 주거 등의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고, 가사분담, 성평등 노동환경, 일·가정 양립, 다양한 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행태 변화나 제도화가 미흡했다. 즉 지난 15년에 저출생 방지 및 지원 정책들의 추진은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불충분한 가족지원,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사회구조적 요인 대응 미흡 등을 한계를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 3) 외국의 대응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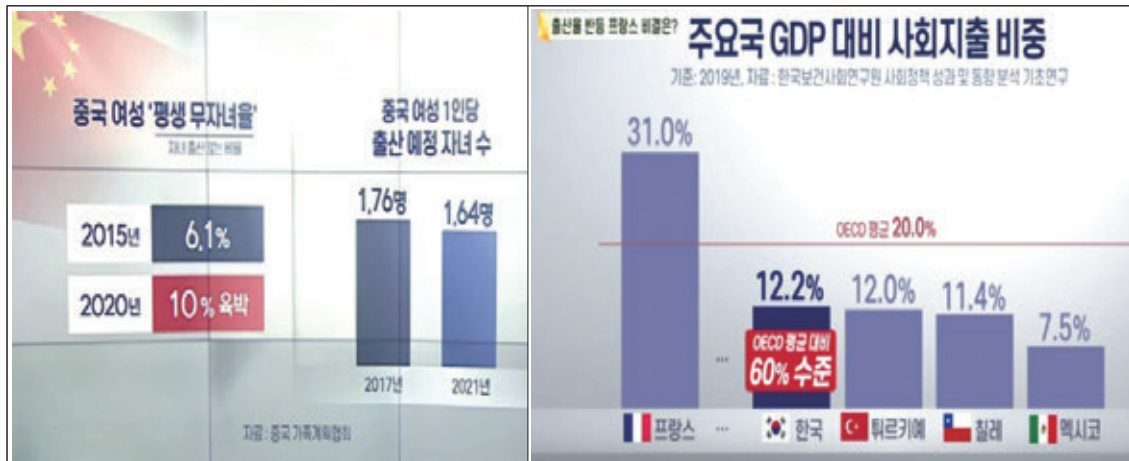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도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 일본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8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작년 출생아는 79만 9,728명으로 전년 대비 5.1%나 줄어들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899년 이후 연간 출생아가 80만 명에 미치지 못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저출생 대책 마련에 서두르겠다고 했다.

중국도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자 긴장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경제성장의 동력이 떨어

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중국 여성이 평생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비율은 10%에 육박한다. 5년 전의 6.1% 보다 급증했다. 중국에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 이른바 '탕핑족'들이 늘어났다는 소식은 이미 오래됐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과도한 교육열과 입시경쟁, 취업난 등 결혼과 출산을 피하는 원인을 없애겠다고 팔을 걷어 붙였다. 중국 당국이 저출생 대책으로 미혼인 경우에도 남자 냉동보관 허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최근 알려지기까지 했다.

선진국은 대체로 저출생, 고령화 현상을 겪는다. 저출생에 대응하는 정책이 쉽지는 않지만, 성공사례도 있다.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프랑스 사례는 연구해 볼 만하다. 2020년 기준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8명으로 유럽 내에서도 손꼽히는 다산 국가이다. 1990년대 중반 1.6명대로 저점을 찍었던 출산율은, 2010년 2명대까지 회복했고, 현재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를 포함한 선진국의 여성취업률과 출산율이, 2천 년대에 들어 정비례로 바뀌었다는 사실도 눈여겨볼만 하다.

제도와 인식이 개선되면서 일하는 여성의 숫자와 아이를 낳는 비율이 함께 올라갔다. 프랑스의 경우, 가족수당 등 현금성 지원책으로 양육비 부담을 줄인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프랑스의 GDP 대비 사회지출 규모는 31%로 단연 앞서간다. 하지만 12%인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60% 수준으로, 더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 칠레, 멕시코 밖에 없다.



가족 관련 지출로 범위를 좁혀보아도, 한국은 프랑스와 독일의 절반 정도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분위기 속 비혼 동거 커플이 보편화됐다는 점 역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일조했다는 평가이다.

2021년 프랑스의 비혼출산율은 62.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해 태어난 아이 100명 중 62명은 전통적 의미의 혼인이 아닌 시민연대계약 등을 맺은 부모가 낳은 셈이다. 반면 한국은 2.9%에 불과하다.

프랑스를 비롯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은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일과 가정



의 균형 유지,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 등이 공통점이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단기간에 출산율을 반전시킬 수 없다면,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대안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거 받아들인 독일은, 장기간에 걸친 이민자 포용 정책을 통해 '인구 절벽'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도 체계적인 이민·이주 정책을 펼치기 위해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는데 이민 정책에선 내국인과 이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독일에서는 2017년 시리아 내전 등에 따라 난민 100만 명이 유입된 후 난민에 대한 혐오 선동과 극우세력 부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러나 독일 사회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난민을 사회의 일원으로서 통합시키는 과정을 꾸준히 밟아갔다. 이제 이민자들은 독일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경쟁력의 하나가 됐다. 출산을 장려하고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이 성공한다면 인구감소 문제가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절박한 수행 과제이다.

저출생 사회가 불가역적이라면 이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적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나,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을 고도화해 노동력이 덜 들어가더라도 생산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더 쏟아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적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 5. 저출생 정책방안과 돌봄서비스를 통한 지역소멸 대비

### 1) 저출생 정책방안

#### (1) 정책의 우선순위 확보

부처 간 사업 및 예산 경쟁이 치열한 만큼 지금의 백화점식 정책 대안들은 규모의 경제학으로 무장된 다른 정책과의 예산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으며, 가시성과 정치적 대중성이 높은 정책부문에 비해 힘을 결집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러 정책부서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 역시 어느 면에서는 추진 체계상 장애가 되고 있다. 정책 추진의 체계와 선호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해 당사자 간 조정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점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저출생 정책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장애라 할 것이다.

저출생 정책은 보육정책과 연계되면서 피로감임 누적되어 있다. 보육의 예산 투여로 인하여 나머지 사업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대

상의 사업마저 지자체들에 의해 저출생 정책 사업으로 포장되면서 오히려 순수 저출생 정책의 순위나 비중이 모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책들이 기혼부부로 하여금 자녀출산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요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하드웨어가 아닌 체감도 높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모성보호제도의 경우 실제로 기혼여성이 균일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추진 의지와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저출생 문제를 단순한 복지제도의 형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사회적 인프라의 문제로 접근할 것인지 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2) 전문조직과 전문가 양성

저출생 정책은 그 당위성이나 시급성 혹은 정책적 전문성이 두드러지게 요구되는 분야로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전문인들의 참여와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고화된 협력조직 혹은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사회변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 미래에 대한 정확한 조망 등이 전제되어 장단기 계획들이 보다 치밀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단순한 정책수행자의 판단보다는 전담기구들의 전문가들을 통한 체계적인 추적 작업을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3) 섬세한 소규모 사업들

최근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별 저출생 정책들을 보면 직접적 지원 형식도 있지만 작은 규모의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큰 범위의 정책들이 앞서 길을 터가면서 섬세한 소규모 사업들이 뒤따라 갈 때 의외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여성정책, 가족정책, 교육정책들이 각각 연결되어 진행되어 가는 중에 특히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부분에 팁을 주는 것이 방법이 된다.

예를 들어, 출산한 취업여성 고용율에 따라 기업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연금 혹은 조세, 기업부담금 감면 등의 탄력적 지원을 행한다. 부부가 아동양육에 공동 참여할 경우 아동 성장기에 보육기관 및 공공 교육시설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출산한 여성의 재고용센터 운영이나 창업지원을 위한 별도의 펀드를 운영하되, 이러한 펀드는 소수자녀가정의 투자나 사교육 수요자의 직·간접세 등을 활용한다.

또한 출산 정책 관련 사업들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의 사업지원 의지가 아무리 강하여도 matching fund나 조직 확대를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시책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정책 의지를 효



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수혜자는 공통적으로 우리 국민이며 동시에 지역민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수렴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 (4) 저출생 기본정책의 내실화

저출생 대응이 기본정책의 내실화를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정책 목표, 정책 대상, 정책 수단 등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정 방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저출생 대응이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응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재확인하고, ‘삶의 질 제고’와 같은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초저출생 장기지속 심화에서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는 ‘혼인율 유지·상향 및 출산 선택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 대상을 결혼·출산이 ‘선택’이라는 전제하에서 한정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 이수율을 보이는 청년 세대들에게 있어, 결혼·출산은 더 이상 이전 세대들과 같은 관행적인 행위가 아니다. 즉, 합리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청년들에게 결혼·출산에 대한 장려나 권고는 설득력도 실효성도 갖기 어렵다. 정책 대상은 ‘모든 세대’ 혹은 ‘모든 청년’이 아니라 ‘결혼 및 출산 선택 의사가 있는 청년’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 수단을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에 집중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OECD 주요국의 경험적 논의, 국민의 정책 수요, 그리고 4차 「기본계획」이 적시하고 있는 저출생 요인 등에서 결혼·출산 선택을 지지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대책으로 인식해 왔던 가족지원 확대와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 수단은 결혼·출산 선택의 양극화가 양육의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육가구의 격차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5) 가족지원의 확대와 경제적 불확실성의 해소

적령기 청년들의 귀속적·성취적 지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격차가 결혼·출산·양육에서의 중첩되는 격차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결혼·출산 선택과 양육의 계층화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해 고용·주거 격차를 완화하고, 출산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가구들을 위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가족지원을 확대하고, 외



국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여 조기 단산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인 사교육에 대한 규제를 통해 양육비용 자체를 축소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족지원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보편적 육아휴직 제도화

에릭슨(E. H. Erikson)의 논의로 널리 알려져 있듯이, 생애초기 아동의 발달과제는 타인과 세계에 대한 신뢰감 형성이다. 이는 출생과 동시에 처음 맺게 되는 사회관계에서 부모가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욕구와 필요를 적절히 충족시켜 주면서 일관성 있는 돌봄을 제공하느냐의 여부가 이후 모든 사회관계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생애초기 부모 돌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영아의 기본권이다. 그렇지만 현행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체계 하에서 다수의 영아들은 생애초기 부모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출산전후휴가자수는 2018년 76,414명에서 2020년 70,949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해 연도 기준 출생아 수의 23%에서 26%에 해당한다. 육아휴직자는 2018년 99,199명에서 2020년 112,040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해 연도 기준 출생아 수의 30%에서 41%에 해당한다.(출산전후휴가자수에 비해 육아휴직자수가 많은 것은 부모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수급 비율은 영아들의  $\frac{3}{4}$ ~ $\frac{2}{3}$ 가 생애초기 부모 돌봄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② 아동수당 지급대상 17세까지 확대

아동수당은 범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자 자녀의 유무와 자녀의 수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용에 따른 가족의 빈곤화 위험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제도이다. 즉, 아동수당은 가족지원 중 현금급여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아왔다. 이에 정부도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한 뒤, 다음 해에 선별 기준을 삭제하고 지급 대상을 한 차례 확대했다. 그리고 최근 제4차 「기본계획」의 ‘영아기 집중투자’ 과제에 따라, 지급 대상을 다시 확대하고 영아수당을 신설 도입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급여의 확대가 오히려 양육지원의 편중과 공백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국가는 아동의 성장기 전체를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스웨덴은 16세에서 20세까지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 학업보조금의 용도로 ‘연장 아동수당’을 프랑스는 14세에서 20세까지 ‘추가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아동수당을 영유아기에 국한하여 도입하였다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반면 ‘영아기 집중투자’라는 명목으로 기존의 육아휴직과 무상보육에 더해 생애초기 바우



처와 영아수당을 신설하여 중복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양육지원의 집중은 국민의 양육지원 수요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국민은 자녀 양육을 사회화 기간 전체에 걸친 장기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2018년 현재 기혼 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언제까지 책임지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학 졸업 때까지가 59.2%, 취업할 때까지가 17.2%,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가 14.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sup>4)</sup> 이는 자녀 양육 비 부담을 느끼는 시기와 영유아기 중심의 양육지원 간의 불일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현행 아동수당은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예방한다는 기대효과와도 배치된다. 2020년 현재 아동의 연령과 국민기초일반수급자수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양육가구들 간의 경제적 격차가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을 의미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과소한 가족지원, 그중에서도 가장 미흡한 현금 급여를 정상화하는 일차적 정책 수단이다. 초저출생 장기지속 심화의 결과로 2020년 현재 유년부양비 12.2명을 기록해 세계 194개국 중 194위까지 하락<sup>5)</sup>한 상태에서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다수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아동기 전체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합당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에 가족지원 특히 현금 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8~17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제도화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 (6) 해외 정책의 도입

무조건적 해외 정책을 도입이 만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방법이 없다면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저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닌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것이다. 저출생 해결 사례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프랑스일 것이다. 프랑스는 저출생 국가에서 고출산 다산 국가로 바뀌어 나갔는데 이는 위에서부터 계속 언급했던 가족지원 정책이 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프랑스의 가족정책이 도입된 초기에는 출산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표방하였으며 이를 위해 가족수당(Les Allocations Familiales)과 소득세의 가족계수(Le Quotient familial)가 두 가지 핵심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가족수당은 주로 저소득층 가정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소득세의 가족계수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프랑스의 가족지원 정책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변화시켜서 장점들을 흡수할 필요성이 있다.

### ① 프랑스 : 자녀수에 따라 세금 차등 부과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에 가깝다. 그리고 명시적인 ‘가족친화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국가보다 일찍 저출생 현상이 나타난 국가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30여년에 걸쳐 출산친화적 정책을 확립하였다. 공무원부터 시작하여 임금노동자, 그 외 노동자로 그 대상을 확대해 가면서 정책패키지를 구성하였다.

1차 세계대전 중 공무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족수입 보조(SFT)가 가장 최초의 프로그램이다. 1932년에 민간부문 임금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가족수당이 확대되었고 2차 대전 직후에는 보편적 권리로 인식되어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농업종사자나 자영업자들에게까지 수혜대상이 확대되기에 이른다. 1938년 가족법이 가결됨에 따라 가족 정책은 사회보장계획의 일부로서 본격화되었고 가족수당이 더 이상 임금 보조수당이 아닌, 자녀양육비를 보조해 주는 가족수당 본연의 의미에 충실해졌다.

전쟁으로 인해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국가재건에 대한 기치가 높아져, 질병 및 모성 보험이 구축되었다. 모성휴가 사용 후 여성의 복귀를 받아들이지 않는 회사가 상당수 존재하자 프랑스 정부는 1984년에 모성휴가제를 부모휴가제로 바꾸어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출산정책이 가진 고유한 장점으로 취학 전 공교육 과정이 2세 때부터 존재하고 있다는 점, 아이들 대부분이 3세부터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아동을 7세까지 부모가 보육해야 하는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른 점이다.

한편, 모성휴가 기간과 공보육 입소 기간 사이에는 육아도우미, 부모 휴가, 단기보호센터 등으로 서비스가 다각화되어 있다. 또 다른 제도적 이점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 체계이다. 이는 소득 절대액에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구의 가구원당 생활수준을 적용한 것이다.

### ② 스웨덴 : 아동 단위의 가족정책과 젠더정책·고용정책 명시화

스웨덴은 일련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이민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좋은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1990년대에 공식적으로 이민을 중단한 바 있다. 더구나, 출산력 제고를 위해 이민을 들여왔으나, 1세대가 지나면 현지 출산율과 동일한 출산율을 보인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이민을 통해 저출생에 대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고 개인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피임을 저지하거나 낙태를 중단시키는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부부들의 희망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남아 있는 가능성이다. 스웨덴은 가족형성과 출산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아동 단위의 가족정책,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 모두에게 분담되도록 하는 젠더정책과 고용정책을 명시화해 왔다. 1970년대에 이미 공식적으로 맞벌이가족 모형이 채택된 바 있고 이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가정의 ‘보살핌 노동’에서도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가족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주된 정책도구는 개인단위 과세, 소득대체율이 높은 부모휴직제, 공보육시설 확충이다. 이 밖에도 사회부조 및 주거지원 등 자산조사(means test)에 기반 한 가족정책을 통해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모성휴가제는 1974년 부모휴직제로 변경되었고, 1995년에는 아버지 휴가 할당제(daddy month)가 30일 부여되었다. 소득대체율 역시 경기변동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80% 이상의 높은 수준이다. 출산간격을 좁히기 위해 간격축소 장려정책(speed premium)이 실시되고 있는데, 출산 후 30개월 이내에 추가자녀를 출산하면, 소득이 낮아졌더라도 관계없이 첫째아이 출산시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

스웨덴의 보육시설은 1970년에 도입되었고, GDP의 0.3% 지출수준을 보이며, 질적 수준도 높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부모의 일·가족의 양립 지원과 자녀의 발달·학습에 대한 지원 등 두 가지 목적 하에 서비스를 확장하였다. 자녀 보육비용에 대한 지원은, 맞벌이 가정과 특수아동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다가 실직가정 아동(2001년), 추가출산 후 부모휴직 중인 가정(2002년)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보육시설 이용률도 단연 유럽에서 최고로 높다.

1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수당인 아동수당은 비과세이다. 부모의 비혼(非婚), 별거 또는 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한 부모 가정에게 주어지는 특별아동수당도 있다. 일시적 재정 부족자, 특히 여성단독가구·청년실업자·난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거치는 지원금 제도가 있다. 가구구성, 주거비 및 가구소득, 자녀 수 등을 감안하여 주거수당도 지급된다.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한 주거수당은 아동에 대한 양질의 넓은 주택 보장 및 저소득가족에 대한 특수지원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 ③ 일본 : 일-양육의 兩立과 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 중시

일본의 출산장려 정책은, 1989년 합계출산율 1.57에 충격을 받고 난 직후부터 개발되었다. 앤젤플랜(1994~1999)은 일과 양육의 양립 그리고 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조하였다. 뉴앤젤플랜(1999~2004)으로 ‘육아휴직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 중에도 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수당 지급 연령대상을 ‘출생 후 ~ 3세 이하 아동’에서 ‘출생 후 ~ 미취학 아동’으로 확대시켰다.

뉴뉴앤젤플랜(2004~2009)은 아동보육을 지원하고 성 평등실현을 주요과제로 삼았다. 젊은이의 경제적 독립도 중요한 과제로 삼아 남성의 육아휴직, 기업의 보육시

설 장려, 젊은이의 취업기회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차세대 육성법'에서는 지방정부와 대기업에게 출산 및 양육 관련 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등,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노력이 가시화되었다. 최근의 정책들은 전통적인 일본의 남녀역할체계로부터 일정한 탈출이 추진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개입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포괄적인 가족정책에 있어 소극적이었다고 평가된다. GDP 대비 가족에 대한 정부지출도 한국·미국·스페인 등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매우 견고한 혼인제도와 결혼문화가 정책의 효과성을 제어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 ④ 싱가포르 : 가족 지원과 일-가족 兩立 지원 추진

싱가포르는 다른 어느 동아시아 국가보다도 명시적인 출산율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된 국가에서 출산율이 회복·상승되는 예는 찾기 힘들다, 싱가포르의 경우 1985년 1.62명으로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이 적극적 정책기조에 힘입어 1990년 1.79명으로 반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2004년 현재 1.25로 낮아졌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녀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의 부족 등이 실제 자녀 수와 이상 자녀 수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8월에 '결혼과 양육 패키지'를 발표하고 가족지원과 일-가족 양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은 다섯 가지 하위 정책영역, 즉 결혼 지원, 출산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 지원, 일-가족 양립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적인 것은, 신혼부부에게 주택 지원, 출산수당 지급 외에 부성휴가를 기업의 인력관리체계(HR)에 포함하기 시작한 것과 WOW 기금을 통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 등이다.

#### ⑤ 헝가리 : 정부의 대출 프로그램

헝가리 정부의 저출생 정책을 살펴보면 결혼 시 정부는 4000만원을 무조건 대출해준다. 자식이 1명이면 이자 면제, 2명이면 대출금 반액 탕감, 3명이면 전액, 4명이면 평생 소득세 면제 혜택을 준다. 아이가 많을수록 혜택은 파격적이다. 실제 임신에서 출산까지 10개월이 걸리므로 추이를 보가며 재정설계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현실적으로 이정도 수준의 국가적 지원이 어렵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저출생 예산·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저출생 예산은 42조 9천억 원으로 지난 2020년보다 7조 2천억 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극단적인 정책 또한 변화의 도약을 위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2) 돌봄서비스를 통한 지역소멸 대비

그 동안 지방분권법, 지방일괄이양법, 자치경찰법의 제정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힘겨운 노력이 있었다. 그 사이에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시도는 좌절되었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등 관계법들의 제·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인구집중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저출생으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의 대도시마저도 인구가 줄어 이른바 ‘지방소멸’로 가고 있음이 매우 뼈저리게 느껴진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 가까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고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저출생과 수도권집중을 막는 법제를 이미 오래 전에 마련하였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 (1) 지방자치단체 돌봄정책

지역주민에게 가장 큰 관심은 늙고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과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가이다. 지역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의 핵심은 ‘돌봄의 소멸’이다. 지방소멸 대책은 많았기에 지역마다 청년지원정책, 귀촌지원정책, 출산지원정책이 없는 곳이 없다. 그럼에도 인구감소는 오히려 더 빨라진 것은 대부분의 정책이 지역 간 인구쟁탈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다. 지역 간 인구경쟁은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패러다임을 바꿔서 지방소멸을 ‘돌봄소멸’로 인식한다면 지방소멸 정책의 초점을 ‘지방’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다. 돌봄은 국가 차원에서도 큰 문제이며, 정부는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한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선별심사과정과 야박한 서비스시간에 좌절하게 된다. 무상보육이 전면화 되었지만, 여성들은 ‘경력단절녀’ 신세를 면할 길이 별로 없다.

이러한 돌봄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와서 돌봄의 국가책임을 지역책임으로 구체화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지역에서 생기는 돌봄 문제의 최종 책임을 지자체가 지는 것이다. 동시에 지자체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보육·주거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합해 활용하며 새로운 정책도 실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받는 것이다. 그러면 인구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역이라면 더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안할 수도 있다. 돌봄 걱정이 전혀 없는 돌봄 시범도시를 만들어 시행한다면, 중앙정부는 중요한 정책 실험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돌봄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니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낸다면 그 자체로 혁신이고 새로운 경제가 된다.

돌봄소멸을 막겠다는 원칙과 간절함을 가져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정 등 아이를 제때 돌볼 수 없는 가정에서 이용하는 육아서비스다. 현재는 소득 수준 등 부부 형편에 따라 정부 지원금 이외 최소 15% 이상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지역에 주소를 둔 부부는 누구나 0원 육아서비스를 곧 받을 수 있게 된다. 0~5세 영유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도 내년 지자체에서 처음 도입한다. 영유아 1인당 1년에 40만원 전후의 경비를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필요경비지원 대상은 현재 각 가정이 부담 중인 어린이집 교재구매비·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등이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도 필요하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중간에 아플 때 보호자 대신 돌보미가 가서 병원 동행·귀가를 하는 0원 육아서비스다. 이밖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가정 형편에 맞게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초등생 방과 후 '돌봄터'도 늘려야 한다. 아이 돌보미 종사자 처우 개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지원책도 지방소멸 극복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 (2) 지역의 균형발전 개혁

저출생에 대응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정책의 중심을 인구밀도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경제력과 삶의 질에 두어야 한다. 양적 성장에만 머무르지 말고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출생과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 지역소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고용불안,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 문제나 높은 주택비용으로 인한 주거불안, 높은 사교육비,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포함한 전반적인 복지 및 사회보장시스템을 개혁하고 지역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문제를 포함하여 국가의 균형발전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여 무엇보다도 수도권중심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국토의 어디에서 살든 삶의 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를 위해서는 특히 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토계획이나 발전계획이 결정되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의사결정구조나 국회의 중앙집권적 입법구조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권력이 지방과 함께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권력균형이 필요하다. 중앙에 치우쳐 있는 권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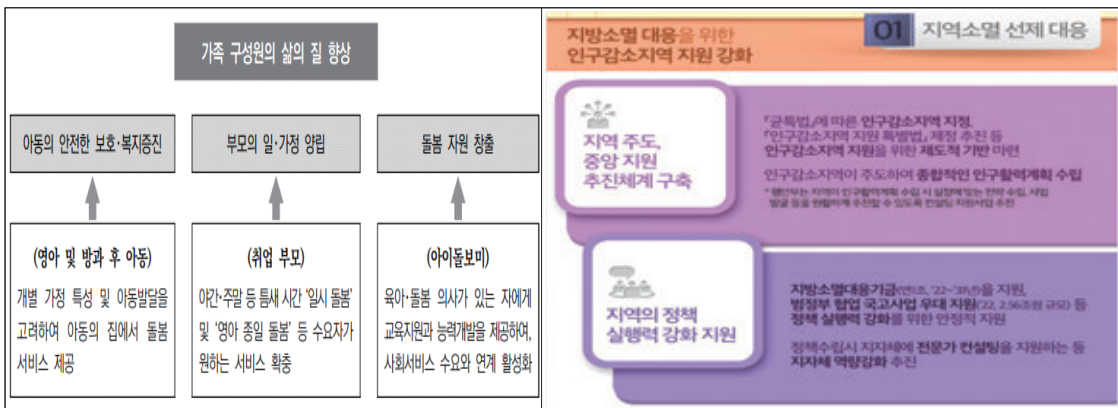




을 미치는 입법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하는 입법구조를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균점하여 균형을 이루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3) 양육 지원 정책

2000년대 이후 한국은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양육 지원 정책은 양육 부담 감소를 통한 출산율 제고 효과와, 고령화 시대의 여성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은 정책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양육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3년 전 계층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제도가 도입되면서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한층 강화되었다. 국가는 양육 지원을 위해 보육서비스 확대, 가정 양육 지원 확대, 휴가·휴직제도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양육 지원 정책의 가장 큰 부분은 기관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품질 관리 예산을 너무 적게 투입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구조 측면에서 보육료 지원의 근간이 되는 표준보육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표준보육비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표준보육비용의 재구조화를 바탕으로 인건비 산정, 서비스 제공 시간 조정 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관리 감독 체계나 평가 인증 체계는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공급 측면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교사 공급 측면에서는 교사의 적정 근로시간과 적정 임금의 확보가 요구되며, 시설 유형 간 교사의 질에 의한 서비스 질에 격차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 교사는 수업 준비와 보육 업무 외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현행 교사 대 아동 비율



에 대한 개선 요구도가 매우 높게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보육교사의 근로 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 유형별 재정 지원 체계의 일원화, 기본 보육 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보육교사 배치와 서비스 제공 시간 등을 구조적 개편 과제로 제안하였다. 이 밖에 기존 정책의 확대 및 개선 과제로 유아반을 중심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고, 정부 보조율을 올리고, 예산 구조를 개선하며 표준보육비용은 현실화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지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3) 지방소멸대응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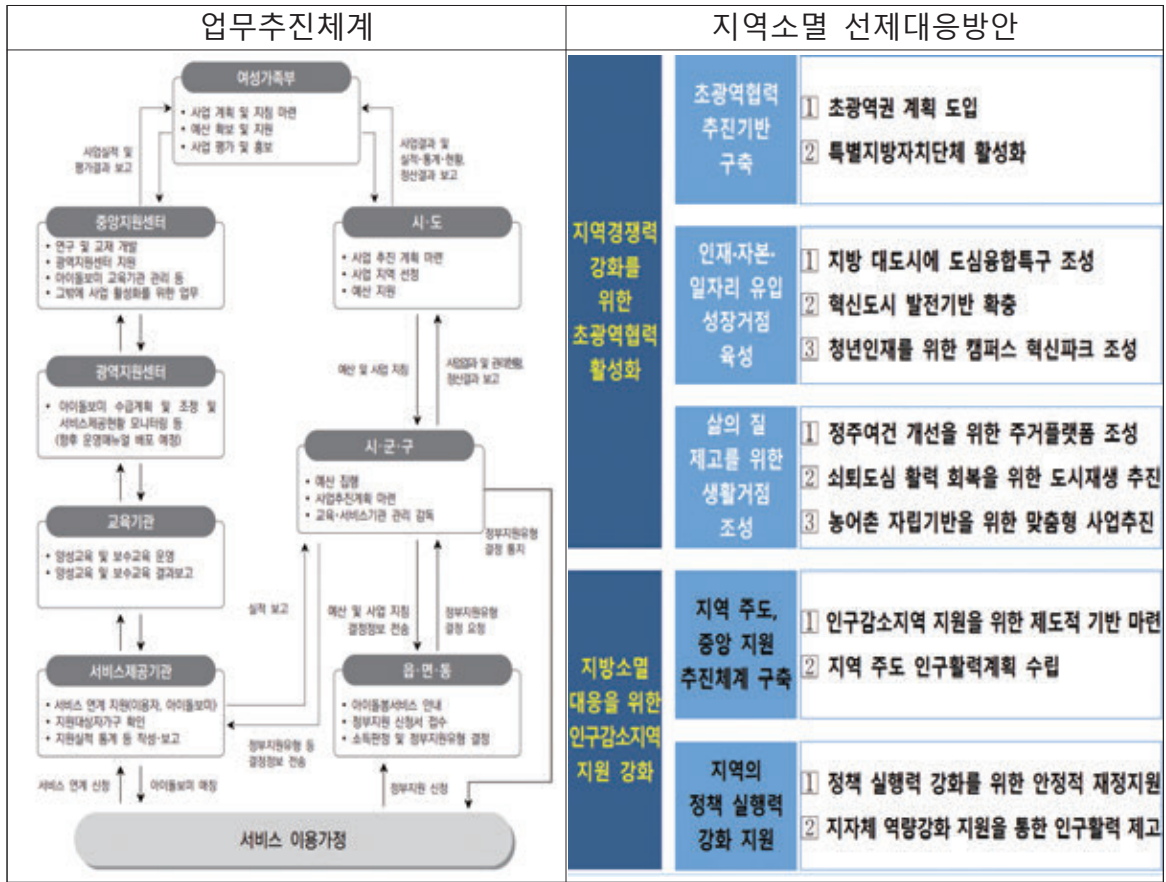
정부가 2022년부터 10년 동안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각 지자체 등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6일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8개 등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0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과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5월까지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해 올해 811건, 내년 880건 등 총 1,691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돼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금은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올해 48억원과 내년 64억 원 등 최소 112억 원을, 관심지역에는 올해 12억 원에 이어 내년 16억 등 최소 28억 원을 배분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충남 금산·전남 신안·경북 의성·경남 함양이며 관심지역은 광주 동구다. 이 지역은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철저한 지역 여건·환경분석에 기반해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했다.

충남 금산군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의 힐링·치유 콘셉트를 부각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 신안군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구축해 폐교 활용 교육시설을 조성한다.

경북 의성군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추진하고, 경남 함양군은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한다.

행안부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역량 제고 및 우수사례 지속 발굴·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 특별교부세 부여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재정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sup>5)</sup>

## (5) 출산장려운동과 종교단체 영유아돌봄 서비스

CTS는 저출생 문제가 중대한 사회문제임을 알고, 2006년에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 NGO를 발족한 이래 CTS 영유아문화원 개원 (2006), 출산장려국민운동본부 출범 (2010), 다음세대지원센터 건립 (2020), 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 (2021) 등 관련 사업을 계속해 왔다. 출대본은 저출생에 기인하는 인구절벽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치기 위하여 2022년 8월 24일에 종교계, 학계, 교육계, 재계, 시민단체 등 각계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하였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는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돌봄’, 특히 ‘0~3세 영유아 돌봄’에 주목하고 있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연구조사 (2021.11.7., “교회의 돌봄사역에 관한 조사”, (주)지앤컴리서치) 결과 응답한 어머니의 78.2%가 ‘아이 돌봄 문제가 해결되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답하여 돌봄 서비스가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이를 돌봐줄 곳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마음 놓고 출산을 할 수 있다. 영유아 돌봄서비스 확대가 출산율 반등을 위한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저출생의 이유로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물론 영유아 돌봄서비스 확대만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면 출산율 반등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율이 반등하는 지역적 특징을 살펴보면 육아·교육·보육지원 등 서비스 지원, 혹은 현물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4개국은 출산율이 하락하던 시기에 출산을 하면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정책이었는데, 최근에는 사회가 아이를 키워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사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유인하는 정책이다. 그러기에 영유아 돌봄서비스 확대는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 6. 앞으로의 과제와 비전

2021년 저출생 예산이 46조원이 넘었는데,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 그 이유는 2021년 예산중에서 출산, 난임 지원과 양육, 보육, 가족복지 등 저출생과

5)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균형발전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활력지원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http://www.korea.kr)).

직접 관련된 예산은 14조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대신, 부동산 관련 임대, 용자사업이 약 25조원이었다. 출산이나 보육에 관한 지원이 낮은 편이다. 과연 어떤 지원이 더욱 효과적인지 정부에서의 연구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돌봄을 제공할 곳이 충분치 않으니, 교회가 그 역할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출대본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197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산업화와 발전 과정에서 교회는 공부방, 선교원, 아기학교 등 다양한 시설로 돌봄과 대안적인 교육의 공간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시설들이 법규의 정비와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사립학교, 대안학교 등으로 발전한 전례가 있다. 전국에 있는 10만 여개 종교시설을 활용한다면 돌봄시설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교회 및 종교시설 내 돌봄서비스를 확대할 수 없는 걸림돌이 있다. 현재로서는 관련법규 등으로 제한적이다. 사회적인 합의 도출과 함께 관련 법규 개선과 시설비 지원,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은 물론, 특히 지역으로 갈수록 돌봄시설 확보가 더 어렵다.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 수익이 되어야 하는데 저출생으로 어린이 모집이 힘들고, 소수의 어린이로 시설을 운영하려면 적자가 되니 포기하게 된다, 특히 지역소멸이 일어나고 있는 지방으로 가면 더욱 심각하다. 이전에 평균 2만명 정도의 면 단위 인구였다면 현재 2천 명 정도로 줄었고, 수 백 명의 정원이었던 초등학교는 입학생이 한 두 명인 곳도 많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는 어린이 돌봄 시설이 빠른 속도로 급감하고 있다. 통계청자료를 분석하면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이 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하기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 현대는 거버넌스 시대이다. 정부와 지역사회, 기업, 시민단체, 교회가 협력하고 상생해야 한다. 교회와 종교단체가 빚장을 열고 돌봄, 문화시설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교류의 장으로 사용하고, 지자체는 이를 지원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지역의 어린아이들은 급속히 줄어들었지만 교회와 종교단체의 건물은 그대로 있는 편이다. 종교단체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활용을 잘 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교단체는 유휴공간이 있고, 인적자원도 있다. 젊은 세대들의 공통된 관심분야인 공동육아나 어린이교육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마을돌봄도 실시하면 좋겠다.

시민사회의 동의, 관련부처와 지자체와의 협력과 관련 법규 개선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하고, 종교단체와 교회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종교시설을 내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구체적 운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해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을 우선한다. 둘째, 돌봄 공백의 전국적 확산에

대비하여 대도시지역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설 당 서비스 대상인원도 소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관련 종사자의 자격조건을 명시하고,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과 같은 엄격한 대처가 바람직하다. 여섯째, 종교시설을 이용하여 주중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주말에는 본래의 목적대로 종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은 환경이 되어야 한다, 저출생문제는 다양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와 사회운동으로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국란일 때 독립운동과 계몽운동을 통해 나라를 지켰던 것처럼, 국가와 민족의 생존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와 정부, 교회, 시민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과 범국민 출생장려 캠페인과 운동 확산이 필요한 시기이다.

인구소멸, 지역소멸, 국가소멸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이 출생장려 운동과 영유아 돌봄서비스에 함께 동참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NARS 입법정책 제106호 \_20220517, 제4차 저출생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6&brdSeq=39070>)

Tomas Sobotka, 「글로벌 불확실성과 유럽 국가의 출산율 동향」,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국제 비교 공동연구 - 동아시아 초저출생 현상의 장기화: 결혼과 출산 생애의 변화.

국회예산정책처. 주요국의 아동수당 지급대상.

박선권 (2017). 아동수당제도 설계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박준우, 여찬구. (2021).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해외 주요사례를 중심으로. 기업과혁신연구, 44(4), 261-280.

이문숙 (2016). "프랑스의 저출생 문제 해소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이소영 외(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채정, 영유아양육지원정책 분석-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전광희. (2018). "유럽의 인구동향 및 저출생 대응 가족정책과 한국 인구정책의 과제." 사회과학연구, 29(1), 219-237.

최문숙 (2007). "저출생 정책과 해결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



&control\_no=707257780ce4dc27ffe0bdc3ef48d419&outLink=K)

최은영 (2006). 「선진 외국의 저출생 관련 정책」, 경제정보센터, 2006년 4월호.

통계청 KOSIS,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022.4.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Trude Lappegard, 「북유럽 국가의 최근 출산율 감소와 정책적 함의」.

### 〈참고자료〉

○ 아이돌봄 지원법(2023.6.28. 시행, 법률 제19129호, 2022.12.27. 일부개정)

#### 추진 목적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가정 내 2세 이하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추진 경과

○ ('07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및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 신규 실시

○ ('08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65개소)

○ ('09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전국 확대, 장애아 양육지원 사업 분리 운영

○ ('10년)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사업 신규 실시(0세아)

○ ('11년) 영아종일제 최소 이용시간을 160시간 → 120시간으로 변경

○ ('12년)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대상 확대,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12. 8. 시행),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 지원대상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 모든 취업부모 대상으로 확대

○ ('13년) 시간제 돌봄 지원예산 확대 및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근거 신설

- 아이돌보미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적립금 지급('13.9.)

- 취약계층 자녀 등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근거 조항 신설('13.11.)

○ ('14년)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연령 확대(만 12개월 → 만 24개월)

○ ('15년) 영아종일제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아이돌보미 휴일 및 야간활동수당 지급

○ ('16년) 이용가정 소득유형 판정기준 변경(전국가구 평균소득→기준 중위소득)

○ ('17년)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연령 확대(만 24개월 → 만 36개월)

○ ('18년) 정부지원 확대(가형~다형)

- 영아종일제·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율 상향(5%p)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480시간 → 600시간)

○ ('19년) 정부지원 확대(중위소득 120% → 150%로 상향)

- 영아종일제·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율(기존지원) 각 5%p 증, (신규지원) 15~20%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600시간 → 720시간)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 주휴 등 법정수당 지급

○ ('20년) 정부지원 확대

- 중증장애 부·모 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 시간 특례(연 720시간 → 960시간)

- ('21년)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720시간 → 840시간)
- ('22년) 한부모 장애아동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가정 '가'형 정부지원율 각 5% 증
- ('23년) 정부지원 확대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840시간 → 960시간)
  - 중증장애 부·모 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 시간 특례(연 960시간 → 1,080시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개요**

##### 가. 아이돌봄서비스 의미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해소에 기여

##### 나.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되어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자!

홈페이지 QR



# 2023 부활절 퍼레이드

2023. 4. 9. (주일)

Live 생방송

**일시** 1부 퍼레이드 오후 2시  
2부 기념음악회 오후 5시 30분

**장소** 광화문광장~서울광장



MC 신현준



MC 이지애



MC 최선규



MC 김선경



범 키



에 일 리



신엘라 & 엘라벨라싱어즈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예랄위시 & 진남매위시



유턴콰이어



제이미션



산송가경연대회 콰라엘, 김민성, 김소희, 김지훈



K-타이거즈



P K 팀



하모나이즈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 **성 한국교회총연합회**  
THE UNITED CHRISTIAN CHURCHES OF KOREA

주관 | **CTS 기독교TV**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CTS 문화재단**

협력기관 |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